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개탄을 금치 못해..



김만섭
(사)한국오리협회장

작년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거의 3년 여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협회에서는 즉각 준비상태세를 갖추고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상황 및 방역조치 사항, 방역수칙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직원 1명 파견을 파견하여 24시간 AI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히 대응해나갔다. 그러나 이후 안타깝게도 '20. 12. 1일 경북 상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전남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전남 나주·장성, 전북 고창, 충남 천안 등 그간 유례없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확산돼 나갔다.

이에 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철새도래지 방역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정부가 시행하는 레이저 총을 이용한 철새 쫓기, 드론을 활용한 소독약살포, 포획검사 등이 오히려 철새를 철새도래지가 아닌 농장 주변으로의 이동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농가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철새가 전혀 관찰되지 않던 지역에서 철새가 출몰하는 등 오히려 전국적인 AI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의 경우 AI에 취약하다면서 AI 발생 이전부터 강화된 조치를 취해 왔으나 AI 발생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오리농가들을 말살시키

려는 초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미 전국 260여 오리농가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겨울철 사육제한을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에서의 AI 항원 검출과 가금농가에서의 AI가 발생할 때마다 10km 반경을 그리고 오리의 입식을 금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경지역의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되는 멀쩡한 종란을 모두 폐기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는 AI 발생지역산 오리의 반입금지 조치까지 시행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만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특히 금번 AI발생부터는 전체 가금생산자단체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성농가 반경 3km의 모든 가금농가들의 예방적살처분 원칙을 고수하며, 무자비한 살처분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했던 '16/'17년도의 가금농가 양성 건수가 전체 421건에 살처분된 가금류가 3,800만수였던 반면 올해는 현재까지 109건에 2,989만수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살처분정책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반경 1km내의 동일 축종에 한하여 살처분하는 것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 AI 및 가금농가들과 가장 밀접적인 관계인 가금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해오던 농식품부가 3km 살처분정책이 농가들의 피해와 사회적 후생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뒤늦게 판단했던 것인지 아니

면 동물보호단체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금산물 가격에 힘겨워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힘겨워 결국에 그 고집을 포기한 것인가? 이미 살처분할 가금은 다 살처분한 마당에 1km로의 조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살처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로 인해 멸절할 오리를 강제적으로 살처분 당한 농가들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는 어떠한가? 다 큰 43일령 육용오리 단가가 5,797원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쳐 보상금을 받더라도 적자이고 종란의 경우에는 사육제한에 따라 폐기하는 종란은 600원, 10km 반경내 이동제한으로 폐기하는 종란은 400원이다. 또 옆친데 닭친격으로 SI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농식품부가 발생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보상금 삭감을 지속적으로 중

HPAI 예방을 빌미로 전국 오리농가 말살하는 농식품부 김현수장관 각성해야 한다

용함에 따라 오리농가들의 생계는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다. 특히 예방적살처분을 하고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3개월간 몇백만원 남짓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려하면서도 앞으로 기약도 없이 입식이 늦어지는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도 2017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이후로 불합리한 보상대책과 과도한 방역조치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김현수 장관 면담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거절당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의 문을 걸어 잠금 상황이다. 또 수백자의 장문 문자로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이에 일언반구 조차 없는 장관의

행태를 보아오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혹독한 겨울 농식품부 앞 흡연부스 앞에 서서 담당 과장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리다 마주치면 잠깐이나마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협회의 지속적 요구로 불합리한 SI 방역조치의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3월 SOP 개정 TF팀을 구성하였으나 실무자 대상 영상회의를 한번 개최한 이후 답보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30여년 근무한 정통 농정관료 출신인 김현수 장관을 믿었던 전국의 오리농가들 또한 SI 방역대책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SI와 관련하여 각종 불합리한 법과 지침 등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해 헌법소원을 다시 추진하면서 김현수 장관의 SI 방역정책과 보상대책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심판할 예정이다. 최근 오리농가들은 억울하게도 정부로부터 합당한 이 유도 없이 억압받으며 정상적인 오리사육 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작금에 현실에 대하여 전국의 오리농가들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농업과 먹거리산업을 책임지는 수장인 김현수 장관은 늦었지만 그간 농식품부의 SI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반성하면서 전국 가금농가와 생산자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